

제1063호 2026. 6. 26.

건설동향

BRIEF_{ing}

• 2026년 1/4분기 건설업 기업경영분석

- 1/4분기 건설업 성장성, 총자산은 늘었으나 매출액 감소 지속
- 건설업 수익성지표, 전년 동기 대비 개선
- 건설업 안정성지표 중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개선

• 건설하도급 생태계의 전환점 : 강력한 규제와 AI·예방의 교차로

- 불법·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범정부·지자체의 전방위적 압박
- 채찍과 당근의 조화 : 규제·처벌 외 자율 예방·인센티브도 병행
- 규제와 기술을 넘어 : 공정한 생태계 안착을 위한 현실적 과제



2026년 1/4분기 건설업 기업경영분석

- 건설업 매출 부진 지속되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은 제한적 개선 -

이지혜(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2026년 1/4분기 건설업 성장성, 총자산은 늘었으나 매출액 감소 지속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6년 1/4분기 건설업 총자산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표 1〉 참조).
 - 2026년 1/4분기 건설업 총자산증가율은 6.40%로 전년 동기(1.73%) 대비 4.67%p 상승함. 7분기째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업 총자산의 증가는 실물 확장보다는 미분양·PF 구조조정·차입 재조달 등에 따른 회계상 자산 증가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공공 토목·공공주택 발주 확대에 따라 재고·공사미수·매출채권 등 회계상 운전자산 증가도 일부 반영 가능함.
- 반면,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은 7분기째 마이너스(-) 수치를 유지하며 역성장을 이어감.
 - 2026년 1/4분기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은 -4.03%로, 전 분기(-12.69%)보다 감소 폭은 줄어들었으나 2024년 3분기부터 7분기째 매출액 감소가 지속됨.
 - 건설업 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건설업 총자산 증가가 외형 회복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뒷받침함.
- 건설업 매출액 감소가 지속되는 것과는 반대로, 2026년 1분기 전(준)산업 및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큰 폭으로 개선됨.
 - 2026년 1/4분기 전산업 매출액증가율은 13.53%로 전 분기(2.48%) 대비 11.05%p 증가하고,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21.13%로 전 분기(4.69%) 대비 16.44%p나 상승함.
 - 같은 기간 총자산증가율 역시 전산업은 4.66%로 전년 동기(1.37%) 대비 3.29%p 증가, 제조업은 6.12%로 전년 동기(1.61%) 대비 4.51%p 상승함.

건설업 수익성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개선

- 2026년 1/4분기 건설업 수익성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6년 1/4분기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6.91%로 전년 동기(3.81%) 대비 3.10%p 상승함.
 -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도 4.81%로 전년 동기(2.98%)보다 1.83%p 높아짐.
 - 건설업 이자보상비율 역시 275.57%로 전년 동기(177.47%)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됨.

-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건설업 수익성 지표가 상승한 것은 외형 확대보다는 비용 구조와 수주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2026년 1/4분기 건설업 수익성지표의 개선은 원가율 하락, 저마진 현장 소진, 선별수주 강화, 일회성 손실 축소 등에 따른 질적 개선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됨.
 - 2022~2023년 고원가 시기에 수주한 저마진 현장이 점차 매출 구성에서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원가 통제가 가능한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원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몇 년간 주요 건설사들이 PF 리스크가 큰 사업과 저수익 프로젝트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하거나,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사업에 선별적으로 참여한 점도 마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와 더불어, 일부 전년도 대규모 총당금 손상차손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도 수익성 개선 폭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음.

- 2026년 1분기 전(全)산업 및 제조업 수익성지표는 건설업보다 더 큰 폭으로 개선됨.
 - 2026년 1분기 전(全)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3.2%로 전년 동기(6.0%)에서 7.2%p 상승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18.15%로 급등하며 전년 동기(6.17%) 대비 11.98%p 개선되어, 건설업의 개선 폭(1.83%p)을 크게 상회함.
 - 전산업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데에는 원가율 개선과 동시에 매출이 21.13% 증가한 제조업의 기여도가 컸던 반면, 건설업은 매출이 여전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가율 하락과 선별수주를 통해 제한적인 이익률 개선만 달성한 결과로 해석됨.

-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 2026년 1/4분기 건설업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은 0.53%로 전년 동기(0.69%)보다 0.16%p 하락함. 총자산이 증가하는 동안 매출이 감소하여 자산 1원당 창출하는 매출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 건설업 안정성지표 중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개선

- 2026년 1/4분기 건설업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하락하여 재무안정성이 다소 개선됨.
 - 2026년 1분기 건설업 부채비율은 106.74%로 전 분기(125.84%) 대비 19.10%p 낮아졌고, 차입금의존도는 21.34%로 전 분기(24.03%) 대비 2.69%p 하락함.
 - 다만 성장성 지표상 총자산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면적 레버리지 축소보다는 자기자본 증가와 일부 차입 재조정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동시에 고금리·PF 리스크 속에서 신규 사업 착수를 억제하면서 신규 PF 및 운전자금 차입 발생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차입금의존도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로 인해 차입금대매출액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건설업 매출액 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차입금대매출액비율[차입금/매출액]×100]은 2025년 1/4분기 35.76%에서 2026년 1/4분기 41.22%로 5.46%p 상승함.
- 요약하자면, 2026년 1/4분기는 건설업 자산은 늘고 매출은 줄었지만, 수익성은 다소 개선됨.
 - 건설업 총자산은 증가했으나 민간 부진과 실물 회복 지연으로 매출 감소세가 지속됨. 반면 원가율 하락, 선별 수주, 저마진 현장 축소로 수익성이 개선되며 전 분기 대비 안정성도 다소 개선됨. 다만 총자산회전을 하락에서 보이듯, 이번 개선은 실물 회복보다는 자산·부채 구조조정과 수익성 방어 성격이 강함.

〈표 1〉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구분	구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구분	성장성	안정성	
		총자산 증가율 ¹⁾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이자 보상 비율	차입금대 매출액 비율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증가율 ²⁾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건설업	2025 1/4	1.73	3.81	2.98	177.47	35.76	0.69	2025 4/4	-12.69	125.84	24.03
	2026 1/4	6.40	6.91	4.81	275.57	41.22	0.53	2026 1/4	-4.03	106.74	21.34
제조업	2025 1/4	1.61	8.62	6.17	522.97	26.61	0.75	2025 4/4	4.69	67.8	19.53
	2026 1/4	6.12	21.28	18.15	1448.58	23.37	0.84	2026 1/4	21.13	67.97	19.43
전산업	2025 1/4	1.37	7.70	6.03	420.53	32.28	0.78	2025 4/4	2.48	88.89	24.43
	2026 1/4	4.66	15.45	13.22	930.83	29.62	0.81	2026 1/4	13.53	86.97	23.88

주 : 1) 전년 말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은행(2026.6.23.), 2026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건설하도급 생태계의 전환점 : 강력한 규제와 AI·예방의 교차로

- 규제도 기술도 만능은 아니다...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과제 -

김민주(부연구위원 · mjukim@cerik.re.kr)

불법·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범정부·지자체의 전방위적 압박

- 최근 중앙정부는 불법하도급, 임금·대금 체불 및 각종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선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5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활용하여 선별한 수도권 내 의심·신고 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함. 점검 결과, 1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무등록·무자격 하도급, 재하도급 등)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 2,580만 원 규모의 체불대금 해소를 지원한 것으로 발표함.¹⁾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또한 6월 8일부로 건설업 매출액 상위 1만 5천 개 업체 중 5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함.²⁾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역시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자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간 추진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사용 여부 및 대금 지급 현황,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밝힘.³⁾
 - 이어서 지난 5월 말 공개된 서울시 자치구 3개 구청 대상 전기·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하도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거나 준공 정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 위법·부적정 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남.⁴⁾
 - (부산광역시) 공공·민간 대형 건설현장 141곳을 대상으로 유관 협회들과 합동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

1) 국토교통부(2026.6.10.),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설법 위반 60건 적발", 보도자료.

2) 공정거래위원회(2026.6.8.), "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보도자료.

3) 기계설비신문(2026.3.6.), "서울시, 불법하도급·불공정관행 점검 고도화".

4)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2026.5.), "전기·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감사결과".

고, 무등록자 하도급 등의 위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함.⁵⁾

- (대구광역시) 최근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 43곳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 점검을 진행한 바 있음.⁶⁾
- (울산광역시) 자체 조사반을 구성하여 건설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의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발견된 일부 행정절차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음을 발표함.⁷⁾
- (경기도) 공공 현장 20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시공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자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자격증 대여, 등록증 불법 사용 등 건설업계의 페이퍼 컴퍼니화에 대한 근절에 나서고 있음.⁸⁾

● 한편,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및 경제적 제재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고됨.

- 국토부는 지난 5월 15일, 불법하도급 적발 시 집행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 또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역시 현행 하도급대금의 4% 수준에서 최대 24%까지 상향하는 등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⁹⁾

● 이와 같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점검 및 제재 강화와 함께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전자적대금지급 시스템 적용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의 논의가 연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제도 변화 압력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임.

- 국토부에서는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적정성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하도급률 82% 및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임.¹⁰⁾
-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공사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법안 통과 시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됨.
-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간 보고서¹¹⁾를 계기로 현행 60일인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점화되면서 향후 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한 업계 관심 및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5) 스키아데일리(2026.5.15.), “부산시, 대형공사현장 141곳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롯데·현대·에이스건설 등”.

6) 뉴스핌(2026.5.11.),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7) 뉴시스(2026.6.10.), “울산 건설현장 실태 조사… ‘불법 하도급·임금 체불 없어’”.

8) 포인트데일리(2026.5.26.), “경기도, 건설업계 불법 관행 뿌리 뽑는다”.

9) 국토교통부(2026.6.16.),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보도자료.

10) 기계설비신문(2026.6.15.), “국토부,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제 개선방안 추진”.

11) 백훈(2026.5.21.),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 중소기업 이슈 포커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채찍과 당근의 조화 : 규제·처벌 외 자율 예방·인센티브도 병행

- 다만 정책 기조가 처벌 및 규제 강화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님. 단속과 제재만으로는 현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방침 또한 병행 추진되고 있음.
 - 우선 국토부가 5월 15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지정된 기간 내 시정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신고 감경제’ 도입 내용이 포함됨.
 - 또한 6월 16일 행정처분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 시 과징금 부과액 등을 반영하고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함.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점검·단속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이면·구두계약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겠다는 계획임.
 -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례로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건설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실제 사례와 법적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며 실무자 중심의 현장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함.¹²⁾
 - 경상남도 김해시는 건설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 현수막, QR코드 등을 활용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QR코드를 통해 불법·불공정 행위 유형별 신고 방법과 상담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고 편리한 신고 환경을 조성함.¹³⁾

AI, 건설하도급 생태계의 대전환을 실현하는 새로운 열쇠

- 최근 건설하도급 관리체계는 사후 적발·제재 중심에서 사전 탐지·예방 중심으로 점차 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AI가 이러한 변화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상술된 바와 같이 국토부가 최근 실시한 건설 현장 집중 점검 과정에서 AI가 활용된 바 있음. 점검 대상 현장은 과거 불법하도급 적발 사례와 각종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수행한 후, 불법하도급 발생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임.
 - 여기서 활용되는 행정 데이터에는 공사별 원·하도급 정보 및 건설공사대장, 업체의 보증·실적 정보, 행정 처분 이력, 재무정보 등이 포함됨.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불법하도급 적발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공사 규모 대비 기술자·장비 보유 수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또는 △특정 공종에서 유사한 거래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을 이상징후로 인식함.¹⁴⁾

12) 대한경제(2026.6.4.), “건설 현장 중대사고 대응 및 불법하도급 예방 설명회 실시”.

13) 이뉴스투데이(2026.5.26.), “김해시,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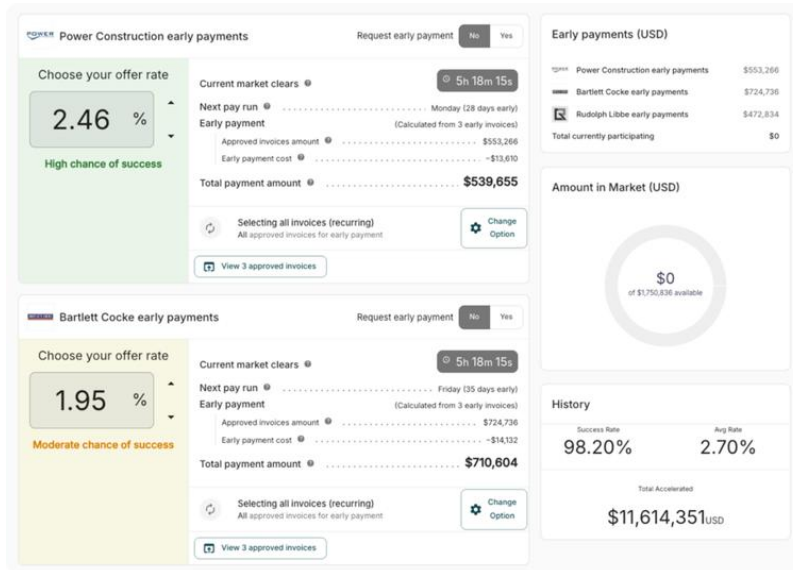
- 공정위 또한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AI 기반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2025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플랫폼의 핵심은 아래와 같음.¹⁵⁾¹⁶⁾
 - [핵심 1]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과거 판례를 학습한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반 계약서 초안 자동 작성 및 불공정 조항 등 법률 리스크 검토
 - [핵심 2] AI를 활용한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 자동 판별 및 벌점 감경 심사 자동화
 - [핵심 3] 민간 활용을 위한 AI 인프라 개방(Open API 구축)
- 이 외에도 디지털 기반 대금 관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하도급 간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고, AI를 적용하여 체불·지급 지연 위험을 낮추며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미국의 건설 대금 결제 플랫폼 기업인 ‘얼리트레이드(Earlytrade)’¹⁷⁾가 그 대표적 예시임(그림 1 참고).
 - 해당 플랫폼은 원·하도급자 간 대금 지급 과정을 디지털화할 뿐 아니라 하도급자가 조기 지급(Early payment)을 희망할 경우, 하도급자가 제안한 할인율(Offer rate)을 기반으로 지급 예정 대금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최근에는 기존 플랫폼에 에이전틱 AI(Agentic AI) 접목을 예고하였는데,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존 시스템 기능과 유사 연구 등 고려 시 <표 1> 형태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에이전틱 AI 기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플랫폼(Earlytrade 시나리오)¹⁸⁾

구 분	주요 내용
대금 조기지급 자동 제안·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대상 협력업체(하도급자) 및 프로젝트 자동 선별 • 하도급자의 지급예정 대금 및 현금흐름 수요를 고려한 조기지급 조건 제안(할인율 제시) • 원도급자의 목표 수익률, 시장금리, 거래 조건 등을 고려한 심사 자동화·승인 후 지급 실행
체불 위험 사전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의 재무상태, 계약변경 빈도, 과거 체불 이력 등 분석 → 지급 지연 확률 제시
공급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자의 자금 건전성 및 현금흐름 변화 모니터링 후 공정 지연·사업 수행 위험 예측
계약·기성-지급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청구 시 증빙서류 및 지급 조건 충족 여부 자동 검증 → 권한자 승인 시 지급 절차 연계
이상 거래 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기성청구 사례 및 원도급자의 승인·거절 패턴 등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14) 본 단락은 대한전문건설신문(2026.6.19.), “AI는 무엇을 보고 불법하도급을 의심할까... 건설업계 대응법은?”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15) 공정거래위원회(2025.10.3.),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계약 예방 위해 AI 플랫폼 구축 추진”, 보도자료.
 16) 법무법인 대륙아주(2025.11.20.),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공정위,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17) 호주 소재의 건설 특화 디지털 대금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2024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매출 7배 상승, 21만 개 이상의 하도급자 대상 네트워크 구축, 조기지급 누적액 30억 달러를 돌파함. Earlytrade(2026.6.9.), “Earlytrade Raises \$25M to Deploy Agentic AI Across the Construction Payments Ecosystem” 참조.
 18) <표 1>은 Pishdad-Bozorgi and Yoon(2022),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subcontractor selection using blockchain-enabled smart contract as trust-enhancing technology”, *Automation in Construction* 142, 104538 및 기존 플랫폼 기능 기반 분석됨.

〈그림 1〉 Trimble사의 원도급사 ERP(Spectrum)와 연계된 Earlytrade사 플랫폼 (예시)



자료 : Trimble Marketplace.

규제와 기술을 넘어 : 공정한 생태계 정착을 위한 현실적 과제

- 우선 최근의 정책 기조가 단순한 단속·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홍보 및 인센티브 기반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체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음.
- 시가 불공정거래 위험 징후 탐지, 임금·대금 체불 예방, 거래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미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하도급 관리 플랫폼이 등장한다는 점 역시 고무적임.
 - 다만, 디지털 기술과 AI의 도입이 곧바로 제도의 실효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기술의 접근성·범용성·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참여 주체 간 시스템 연계와 학습 데이터 및 입력 자료·정보의 표준화, 초기 구축·운영비용 부담 완화, 다양한 민간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수용·인정 범위 마련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계약-기성-지급과 같이 현실적으로 현장 여건과 개별적 판단이 중요하여 온전한 ‘학습’ 또는 ‘자동화’가 제한적인 영역이 있는 만큼, AI는 의사결정을 대체하기보다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예방·자율개선의 움직임이 있더라도 여전히 정책 기조는 규제 및 제재 강화 중심임. 관련 제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 이행 여건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규제 강화 조치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제도 수용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큼.
 - 특히 건설산업의 특수성과 최근의 공사비 상승, 현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 보다는, 발주자-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